

# 일률적 지역화폐 지원정책 보완

### 안혜영 경기도의회 의원 지원정책 연구용역 보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비자 중심의 일률적인 지역화폐 지원은 소상공인 업종별로 그 효과가 양극화돼 나타나기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Post-COVID 안혜영(민주·수원11) 의원 경제연구회 회장은 14일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분석과 대응과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비대면 영상회의의 줌(ZOOM)방식으로 개최했다.

안 회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비자 중심의 일률적인 지역화폐 지원은 소상공인 업종별로 그 효과가 양극화돼 나타나기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재난



안혜영 도의원이 지난 14일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분석과 대응과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비대면 영상회의의 줌(ZOOM)방식으로 개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 및 지원단계 등 추가적인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최종보고회까지 수고한 연구진을 격려했다.

조경훈 교수 등 연구진은 △다양한 소

상공인 지원정책의 수혜자 특성별 성과 분석 △지역화폐를 활용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직·간접적 분석 결과를 도출했으며 특히 지역화폐는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을 견인하는데 상당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구진은 정책 제언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 성과자료 구축 및 활용 △지원정책별 제도개선 방안 △경제적효과 제고 방안 △경기도 소상공인 조례 개정안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 최종보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최종보고를 청취한 Post-COVID 경제연구회 이진영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집행부에서 밀착한 사업점검과 향후 체계적인 논의가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련된 토론회 등 논의의 장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어 김용성 의원은 “연구용역이 단순히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좀더 진전된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창 기자

## 의회 단신

### 인천 남동구의회 추경안 심사

#### 제278회 임시회 열려 다음달 1일 최종 의결

인천 남동구의회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남동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3일~30일까지 남동구청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받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한다.

3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이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78회 임시회는 폐회하게 된다.

박근식 기자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은 17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화성시 그린농업기술대학(원) 입학식에 참석해 올 해 입학한 학생들의 새로운 도전을 축하했다. (사진=화성시의회)

### 그린농업기술대 입학생 건승 기원

####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은 17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화성시 그린농업기술대학(원) 입학식에 참석해 올 해 입학한 학생들의 새로운 도전을 축하했다.

농업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화성시그린농업기술대학은 지난 2008년 개교해 2021년까지 14회 차에 걸쳐 168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 새로 신설된 ‘농업강사양성과’와 ‘청년농업CEO’과를 비롯해 과수와 채소과·농산물가공과의 5개과 100명의 입학생들이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 및 외부강사로부터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배우게 될 예정이다.

화성시로 귀농 하시는 분들과 앞으로 미래먹거리산업에 이끌어갈 전문농업인들에게 그린농업기술대학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종 영농 프로그램들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원유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견건한 심정을 엮어낸 화성시그린농업기술대학은 지난 2008년 개교해 2021년까지 첫 씨앗을 뿌리게 된 입학생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화성시 농업의 미래를 여러분의 빛나는 아이디어와 손길로 더욱 눈부시게 바꾸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영진 기자

## 경로행사 바뀌어야하나, 폐지해야하나

### 수원시의회 의정토론회 경로행사 효율성 제고

수원특례시의회는 1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경로행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명규(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경로행사 효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

했다. 한연주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경로행사의 변화와 경로행사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면서 “지역별로 노인인구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로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경로행사에 대한 끊임 없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경로행사의 폐지나 변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미옥(민주당, 금

곡·입북동) 수원시의회 의원, 최영옥(민주당, 원천·영통1동) 수원시의회 의원, 황민웅 대한노인회 수원시 장안구지회 사무국장, 유용현 정자2동 주민자치위원장, 윤영숙 수원시 노인복지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경로행사 효율성 제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조 의원은 “어르신들의 행복도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고립·우울감·소외감 등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어르신들

의 소외감 해소, 사회적 관계성 회복을 위해 행사 참여의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노인인구는 느는데 예산은 삭감돼 행사의 질이 떨어진다”며 “소외되는 노인들이 없도록 작은 단위로 경로행사의 목적·취지를 살려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규 의원은 “경로행사의 취지를 살려서 어르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심도있고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로행사를 유지하되 더욱 발전시켜서 추진하자”고 말했다.

김희열 기자

##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심의

### 인천 서구의회, 임시회 개최 16일부터 13일간 일정으로

인천시 서구의회가 제249회 인천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1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총 1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먼저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도권매립지 청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광역철도 서구 유치에 관한 활동결과보고서 승인 등을 시작으로 17일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1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송춘규 서구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22년도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심도있고 실효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안중삼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가 제249회 인천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1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총 1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사진=인천 서구의회)

## 대통령 당선, 공약은 지금부터

# 코로나19 공약... “세심한 조정이 우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국민이 바로 실생활에 접할 수 있고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코로나19 관련 공약이다. 이에 대선기간 동안 추경의 규모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지원 등에 관련해 각 대선 후보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왔으며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된다면 50조원을 투입해 기존 정부 안과 별개로 600만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개 발언했었다.

### 윤석열 당선인 코로나19 공약 50조원 재정자금 확보가 관건 한국판 뉴딜 비효율적 요소 예산 줄여서 소상공인 지급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윤 당선인은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하고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 공약하며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의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인 김소영 교수는 추경 50조원을 전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으며 한국판 뉴딜의 비효율적 부분과

공공일자리 등의 예산을 줄여도 충당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 구조가 비대면화·디지털화로 전환되는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는 경제 정책이기에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또 한국판 뉴딜 정책 10대 과제 중 특히 지능형(AI) 정부·스마트 의료·국민안전 디지털화 등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 세세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공공일자리 사업도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이 주를 이뤄 잘못하면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예산을 뺏어 소상공인·자영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는 모습. (사진=연방뉴스)

자에게 배분되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0조원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공약 중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나누어 부담하는 임대료나 보증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한다. 그러나 위 정책에는 전제조건이 ‘코로나19 종식이 불으므로 임대료를 삭감한 임대인은 정부의 삭감액 보전 및 세액공제 정책에 준비해야 하는 맹점이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세금과 임대료·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한 지급지원 및 세제지

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전기·수도요금 등 부담을 한시적 50% 경감한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도 총분하게 연장한다는 방침이지만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발표된 바가 없어 인수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방역조치 기간에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보상사각지대 지원과 관광사업자의 재정 및 용역으로 관광업계도 회복시킬 것이라 전했다.

#### △방역 체계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내에 전면 개편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방역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약속했다.

따라서 신종감염병의 선진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개편하고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모든 병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음압병실을 증설과 함께 감염병 환자를 구분해 운영할 수 있는 중환자실 및 응급실 시설 개조 비용도 지원하

며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해 의사와 전문간호사의 이탈을 방지와 감염병 전용 중환자실과 중증외상센터·분만실 등도 확보한다.

그러나 공공정책수가 도입은 민간병원의 공공의료사업의 위탁 비용을 국가에서 보존한다는 방침으로 이에 관련한 반대도 만만 찬을 예정이다.

즉 국가가 직접 음압병실과 중환자실·응급실을 운영하는 국립병원을 신설하기보다 민간병원부터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의료계는 환영하고 있으나 이 정책은 민간병원의 운영 비용까지 보존할 수도 있어 장기적으로 주 대역육성으로 관광업계도 회복시킬 것이라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이와 함께 자가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이송과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와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해 국민 편의와 감염병 예방도 도모한다.

이 외에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해 사망자와 부작용 피해자는 치료비 및 장례비 선지급 후 정산하고 백신과 치료제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첨단 의료분야와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도 국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공약했다.

홍정윤 기자